

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5.6.25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1. 국내

□ 산업계

- **현대차그룹, '충청북도 수소 도시' 조성 민관협력 강화**(25.6.24. 연합뉴스)
 - 현대차그룹은 24일 '충청북도 수소 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(MOU)'를 체결했다고 밝힘
 -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예산 및 인허가 지원을,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관련 행사와 수소가스 안전 허브센터 구축을, 한국가스기술공사, 한국전력은 사업 전반에 진도 및 성과관리, 전력 인프라 구축을 맡음
 - 현대차그룹은 청주시에 건설 중인 청정수소 생산시설 규모를 4배 확대할 예정이며,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수소 사업의 글로벌 확대를 가속화 하겠다고 밝힘
- **하이리움산업, 기술 선도기업 수소 분야 단독 선정 '쾌거'**(25.6.24. 가스신문)
 - 하이리움산업이 세계경제포럼(WEF)이 발표한 '2025년 기술 선도기업'에 수소 분야에서 단독으로 선정되며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
 - 하이리움은 국내외 실증 사례와 대형 공급 계약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으며, '한-불 액화수소 항공기술 워크숍' 공동 개최 등 글로벌 협력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음
- **두산 수소발전, 서라벌도시가스와 협력 본격화**(25.6.24. 투데이에너지)
 - 두산퓨얼셀과 서라벌도시가스는 최근 '분산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및 운영 관련 양해각서(MOU)'를 체결하고 특정 지역의 전력 자립도를 높이는 분산형 발전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로 함

-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공급이 불안정하거나 대형 송전망 연결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독립형 전원 공급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, 외부 전력망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발전을 통한 에너지 자급체계를 구축하게 됨

□ 지자체

- 전주 탄소산단에 9개 기업 '새 등지'...총 773억원 투자('25.6.24. 아시아투데이)
 - 전북자치도는 24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입주 희망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, 총 773억원 규모의 투자와 226명의 신규 고용을 이끌어냄
 - 이번 협약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은 탄소 소재를 비롯해 수소, 로봇, 이차전지, 항공 등 전북자치도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핵심 산업 분야의 강소기업들이며, 1만 6100평 부지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임

□ 기관

- 울산경제자청, 수소산업 외투기업 애로사항 듣는다('25.6.24. 에너지신문)
 -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어 수소산업 발전방안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수소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함
 - 수소·저탄소에너지를 포함한 핵심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, 기업과 연구기관,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과 정책을 추진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과 현장 지원을 통해 국내외 수소산업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이어갈 계획임
- 기초과학지원연구-가스안전공사, 수소안전기술 공동연구 맞손 ('25.6.24. 헤럴드경제)
 -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(KBSI)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안전기술 고도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
 -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초과학 공동연구와 최첨단 연구 인프라 공유로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, 수소 안전 분야의 기술 혁신을 추진할 계획임

-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, 비파괴 검사 활용한 재검사기준 마련
(‘25.6.23. 가스신문)
 -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의 안전 강화를 위해 비파괴검사 항목을 신설하는 KGS AC116(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기준)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함
 - 이번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, 재검사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검사업무 처리지침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의무화 시기는 24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키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함

II. 해외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- 독일, 교통 연료에 '40년까지 그린수소 12% 의무화(Fuel Cells Works, 2025.6.23)
 - 독일 연방정부가 EU RED III*·ReFuelEU** 이행을 위해 교통 연료에 RFNBO*** 의무비율을 '40년까지 12%로 설정하는 새 법안을 공개할 계획
 - * EU 재생에너지 비중과 의무 사용 기준을 규정한 지침
 - ** EU 항공 연료에 재생·저탄소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규제
 - *** 비생물기원 재생연료
 - 도로·해운·항공 등 전 교통 부문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GHG 감축 목표를 '40년 53%로 상향해 EU 최소요건*보다 강화할 예정
 - * '30년까지 RFNBO 최소 1% (교통 연료 기준)
 - 식용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장 검사 의무화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
 - 그린수소와 합성연료를 핵심 탈탄소 수단으로 확대해 '45년 넷제로 달성을 뒷받침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

※RFNBO 의무화 주요 내용

구분	내용
정책 명	RED III 이행 교통 연료 RFNBO 의무화
주관	독일 연방환경부
목표	'26년 0.1% 시작, '40년 12% 의무화, GHG 감축 53%
적용 범위	도로·해운·항공 전 부문
시행 시기	'25년 승인, '26년 시행
특징	EU 기준(2030년 1%)보다 상향, 식용 바이오연료 단계 폐지

□ 글로벌 산업 동향

○ 영국 East Coast Hydrogen £96m 지원 확정 (Fuel Cells Works, 2025.6.23)

- Ofgem*이 £96m을 승인해 East Coast Hydrogen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가스망을 수소망으로 전환해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
 - *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, 전력·가스망 운영과 투자 승인 담당
- Teesside와 Newcastle 등 북동부 3대 거점을 중심으로 Humber, Yorkshire, East Midlands까지 연결해 발전과 중공업 등 주요 산업 수요처를 확대할 계획
- 정부 £500m 규모의 지역 수소 운송·저장망 투자와 연계해 엔지니어링, 계획 수립, 주민 협의가 진행되며 Project Union 구축이 본격화됨
 - * 영국 전역 1,500마일(약 2,400km) 규모의 국가 핵심 수소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대형 인프라 계획
- '30년대 초 수소 공급을 목표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전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산업 탈탄소화, 에너지 안보 강화, 일자리 안정 효과가 기대됨



Image: Map of East Coast Hydrogen